美 의회에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어쩌냐”… 野 “국제 망신”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의회 폄하 논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크게 실추됐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굴, 빈손 외교에 이어 막말 외교로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이냐”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트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약 48초간 접촉했는데 행사 퇴장 도중 미 의회를 겨냥해 “국회(미 의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한 것이 MBC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美 의회서 막말 파문
행사 퇴장 도중 발언 카메라에 담겨
민주 “무능도 모자라 국격까지 실추”
한일 정상회담 ‘일방적 구애’ 지적도

이어 “일본 수상은 손수 찾아가서 간신히 사진 한 장 찍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회의장에서 스치듯 48초간 나눈 대화가 전부”라며 “왜, 무엇을 위한 순방인지 의아하다”고 탄식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전 대응·사후 조율도 못한 실무 외교라인의 무능도 모자라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품격만 깎아내렸다”며 “정상외교 목적도 전략도 성과도 전무한 국제 망신 외교 참사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트 제7차 재정공약회의’참석 후 퇴장 도중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한 것이 MBC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다.

MBCNEWS 공식 유튜브 캡쳐

나아가 박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과 련 “일방적 구애로 우리 국기인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이 마주한 비굴한 모습에 불과”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다”며 “윤 정부의 빈손외교 비굴 외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어느 때보다도 국익을 위해 첨예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정상외교 자리”라며 “무엇보다 더 큰 걱정은 막말 외교 사고의 큰 후폭풍”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 대변인은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국내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기대했던 국민께 윤 대통령이 남긴 건 욕설 사고 시한폭탄밖에 없지 않나”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 해명을 촉구했다. 오 대변인은 “모든 외교의 시간이 끝난 뒤에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정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별 기자

“野 입장에서 외교 성과 비판할 수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회의서 밝혀

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겨냥한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예의는 지키라”고 선을 긋는 한편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치켜 세웠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 야당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유엔(UN) 연설에는 “세계 시민이나 국가가 자유를 위협받을 때 국제 사회와 연대해 지켜야 할 것이라며 국제 연대를 통한 자유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고 평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에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제규범 체제에 입각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유 진영의 연대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 눈치만 살펴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식 회담을 한 것에 “윤 정부가 들어선 후 수년간 격리됐던 양국 관계에 훈풍이 돌아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진석

정 위원장은 “물론 양국 간에는 휘발성이 큰 쟁점도 남아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견과 갈등은 공정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윤 대통령이) 다수 정상과 ‘풀 어사이드’(pull aside) 형태로 회담을 한 것은 대한민국 위상을 국제 무대에 보여 준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풀 어사이드는 공식 회담장 밖에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진행하는 약식 회담을 뜻한다.

성 의장은 “(야권에서)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중국 방문 때 ‘혼밥’을 하고 우리 언론인이 공안에 두드려 맞았던 일이 진정한 외교 참사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상이 외교 무대에서 국익에 맞게 활동하는 것을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도를 지켜야 할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응수했다.

그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문 정부가 망가트린 한일 관계가 윤 대통령에 의해 복원됐음에 국민들은 안도한다”며 윤 대통령 감싸기에 나섰다. 김한별 기자

윤석열·기시다 ‘뉴욕 대좌’… “한일관계 회복 시작됐다”

대통령실 ‘갈등 해결 첫걸음’ 평가
일각 관계개선 속단 어렵다는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대좌’는 한일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날 양자 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만난 이래 2년 9개월여 만에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이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회담 직후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상 간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외교 당국 간 대화에도 속도를 높이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간에 여러 갈등이 존재함에도 양 정상이 만나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두 정상이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외교 실무 당국자 간 협의 채널 정례화 등 후속 조치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번 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했다는 인식 속에, 이를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성사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을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천명, 이를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선언은 지난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관계 회복을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의 한 극복 방안으로서 접근해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각 공조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자는 데 공감하고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역내 안보의 최대 위협 요소로 꼽히는 북핵 대응 공조도 주요 의제로 부각됐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 정상이 대화의 물꼬를 튼 데서 더 나아가 임기 내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이끌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국이 회담 성사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기 싸움’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은 것이 단적인 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고 공개했다.

그러자 일본 측은 한국 측이 회담 여부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

기시다 총리가 전날 “그렇다면 반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며,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까지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상황 관리’에 나섰다.

한국 내 뿌리 깊은 반일 여론이나, 한일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일본 집권 자민당 내 목소리를 극복하는 것도 넘어야 할 주요 장애물로 꼽힌다. 연합뉴스

SUBSCRIPTION

경기신문이
경기·인천지역 지방지 최초로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문의전화
031-268-8114

연간 구독자에게는
박재동 화백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만평을
액자에 담아 개별 연락 후 보내드립니다.

무통장입금
농협 317-0001-9443-21 [입금주 : 경기신문]

최초 결제일로부터 메일링 서비스 제공
1개월 구독권 - 10.000원 / 1년 구독권 - 110.000원

해당 서비스는 유료이며,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 분들은
경기신문 홈페이지 (www.kgnews.co.kr)
우측상단 ‘온라인구독’ 클릭 → 구독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시면 사용가능합니다.